

# 중소기업 정책 환경 변화와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과제

---

2021.11.17(수) 중소기업중앙회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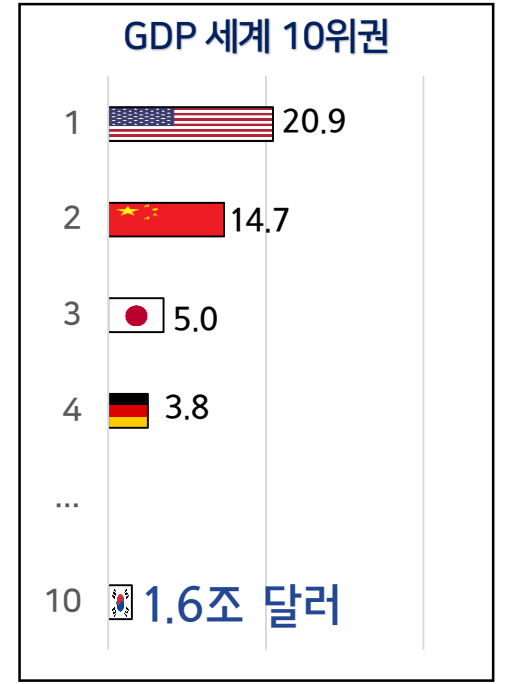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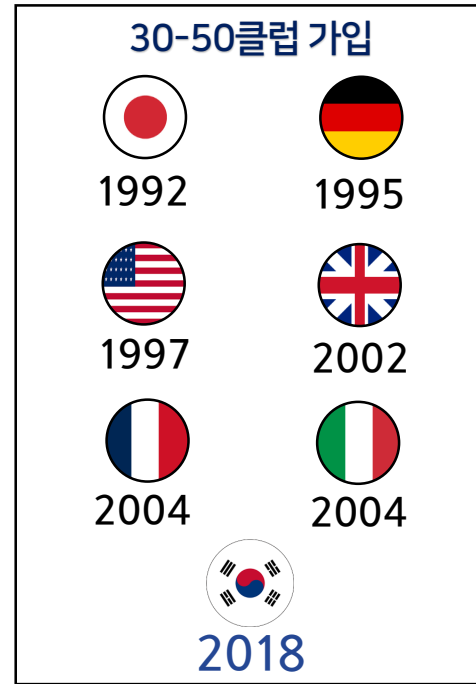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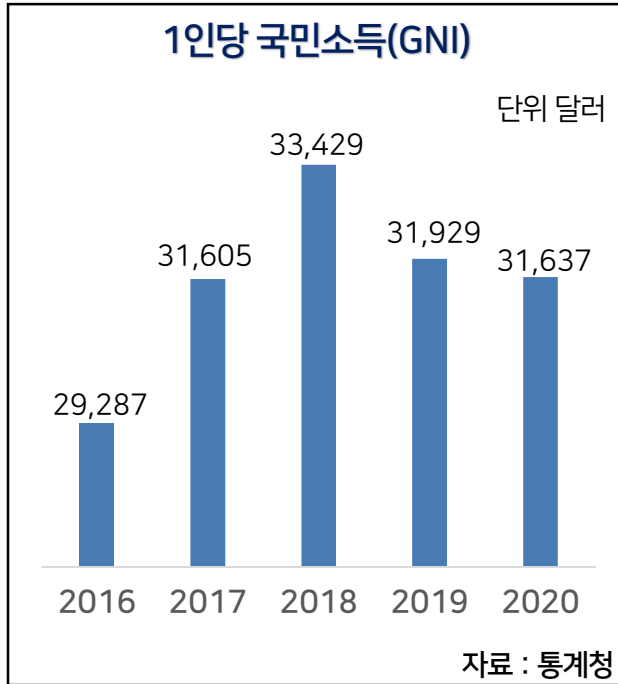
01 대한민국과 중소기업 . . . . . 3

02 중장기 메가트렌드 . . . . . 8

03 중소기업 위기 진단 . . . . . 16

04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과제 . . . . . 29

# 한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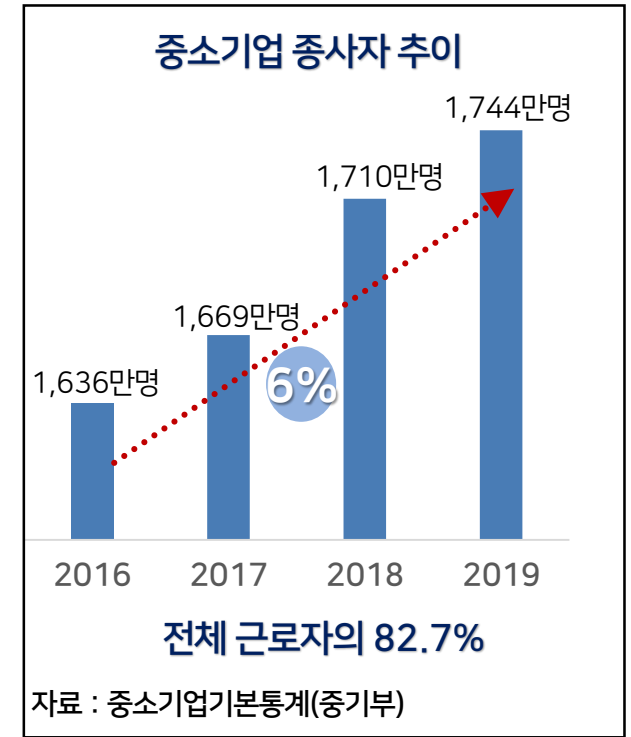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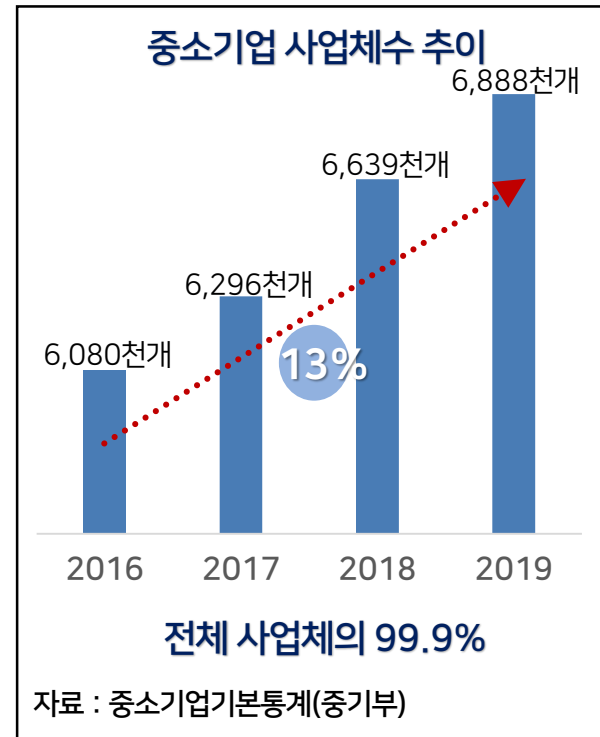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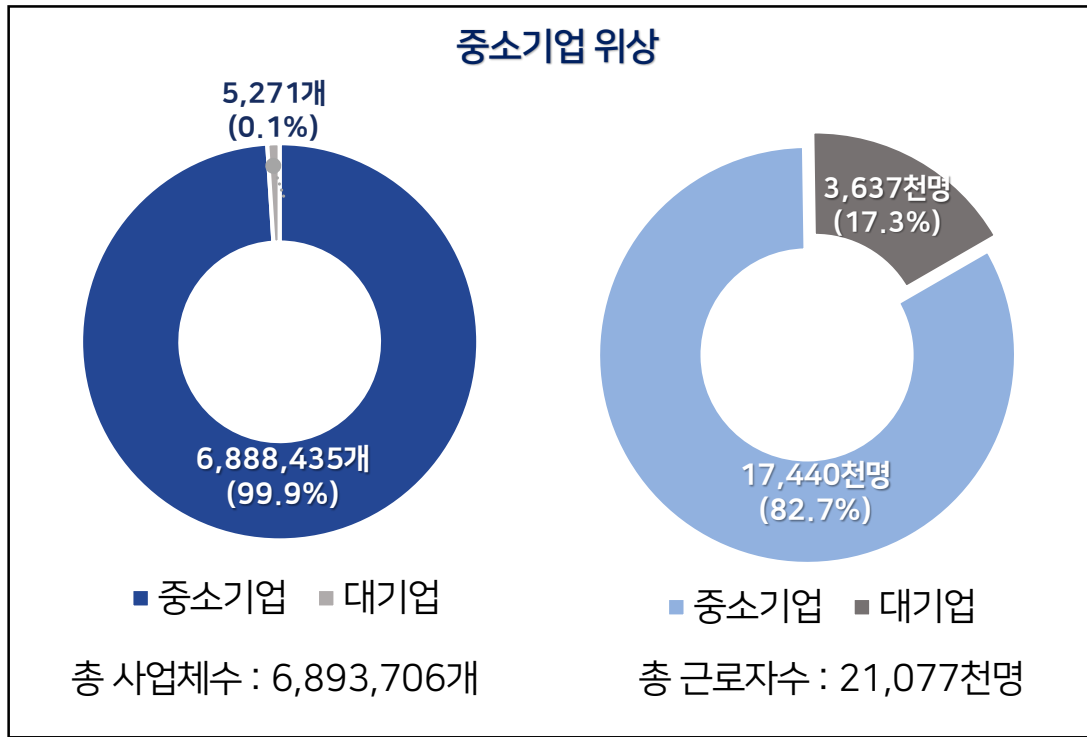
- 유례 없는 성장(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 : (1961년) 82달러 ⇒ (2020년) 31,637 달러
- 2018년 세계 7번째 3050 클럽 가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 2020년 명목 GDP 1.6조 달러 달성 (세계 10위)

## 성장 경로에 따른 주요 산업 및 정책 변화

	1960~ 1970s	1980~ 1990s	2000~ 2010s	2020s
발전전략	수출중심, 중화학	첨단제조업, 기술·시장 개방	신성장 동력 사업	디지털뉴딜
주요산업	경공업, 철강 등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정보통신산업, 부품소재, 신기술 등	소재·부품·장비, 수소, DNA 등
중소기업 정책	중소기업 정책 태동, 근대화	보호 육성 및 구조 고도화	자율경쟁 도입 및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 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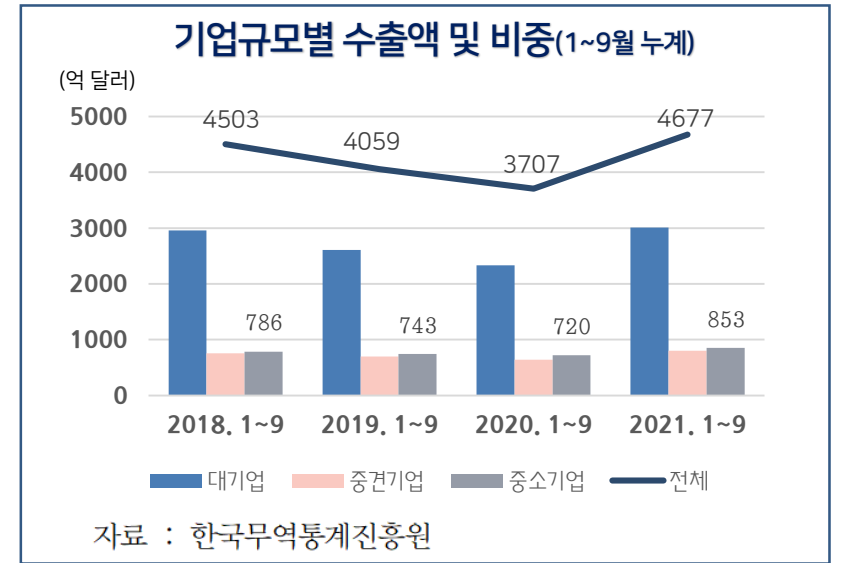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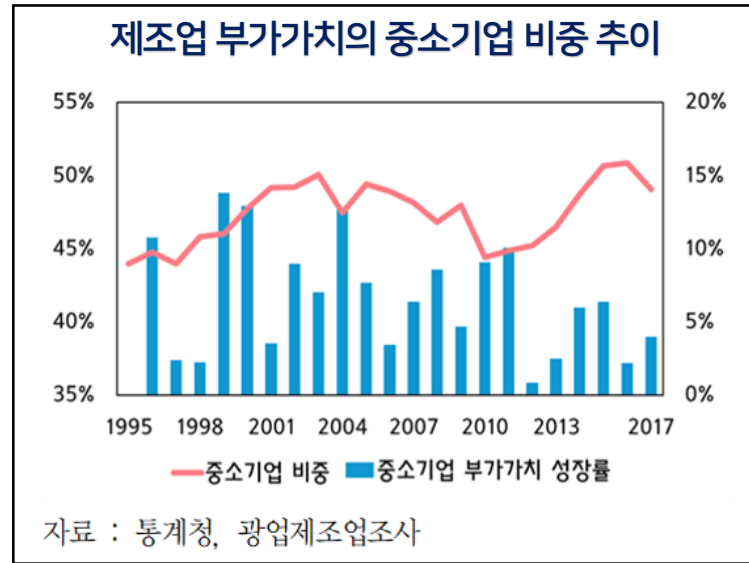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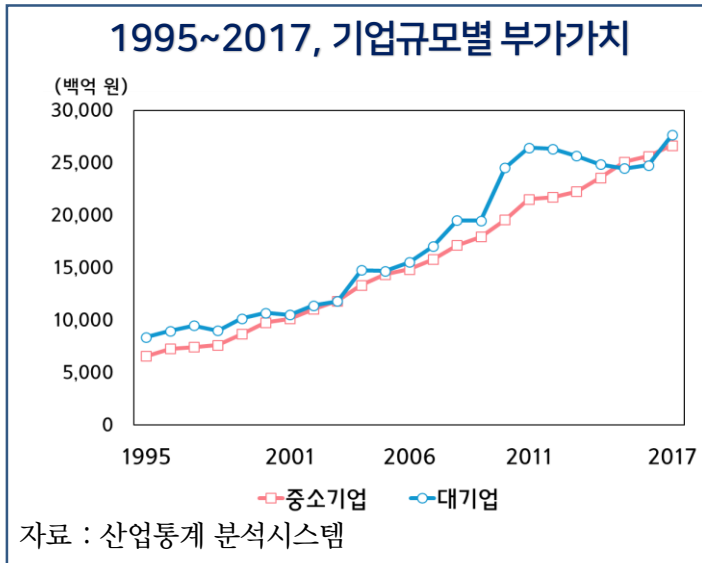
- 1960~1970년대 : 중소기업 정책 태동(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6년 중소기업 기본법 제정 등)
- 1980~1990년대 : 중소기업 보호 육성과 구조 고도화
- 2000년대 이후 : 코로나가 가져온 대전환기를 맞아 양극화 해법으로 공정과 상생 중요

# 중소기업은 사업체수의 99.9%, 고용의 82.7%를 차지,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



- 중소기업 사업체수·종사자수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체수는 연평균 13% 성장 : (16년) 6,080천개 → (19년) 6,888천개
  - 종사자수는 연평균 6% 성장 : (16년) 1,636만명 → (19년) 1,744만명

# 부가가치 및 수출 기여를 통한 성장 견인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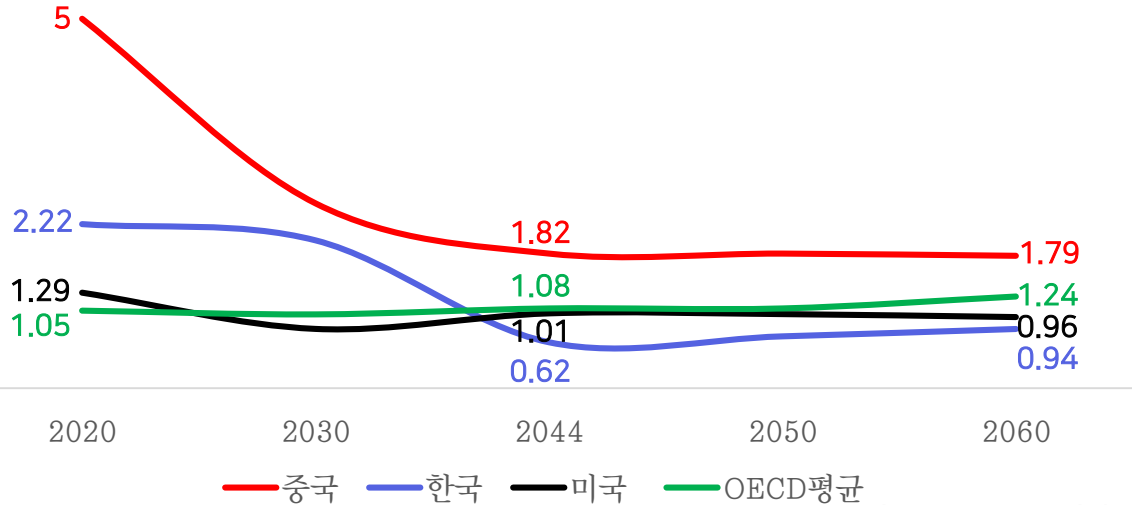


-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과 수출 기여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
  - 전산업 부가가치 성장률 : 중소기업 6.6% vs 대기업 5.9%
  -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장기적으로 성장 중

# 중소기업과 한국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률은 곤두박질치는데 나라빛은 급증 전망

주요국 잠재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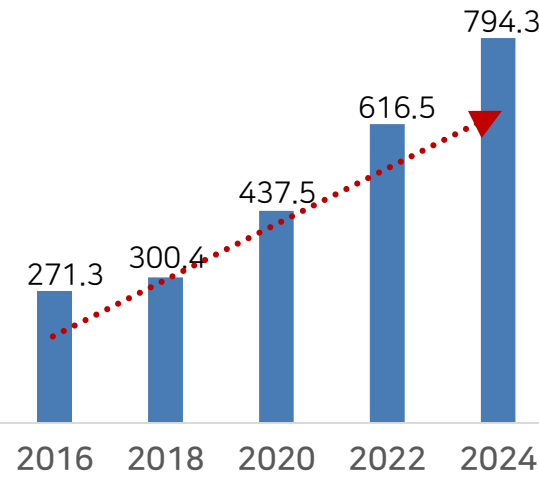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OECD,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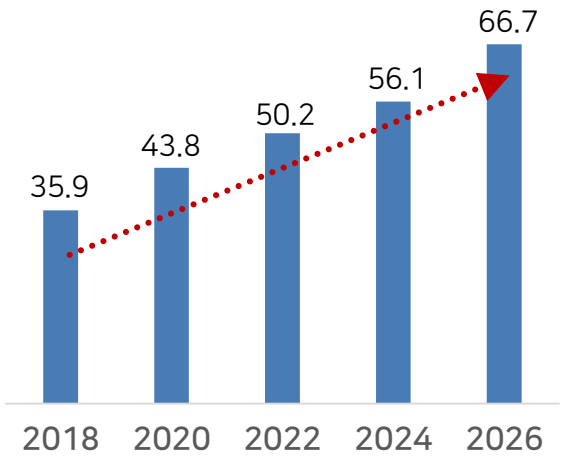
적자성 국채 잔액 추이

단위 : 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 : %



자료 : 기획재정부, IMF

- 한국 잠재성장률 2044년 0.62%(OECD 38개국중 꼴찌)  
- OECD 평균 1.24%, G20 1.14%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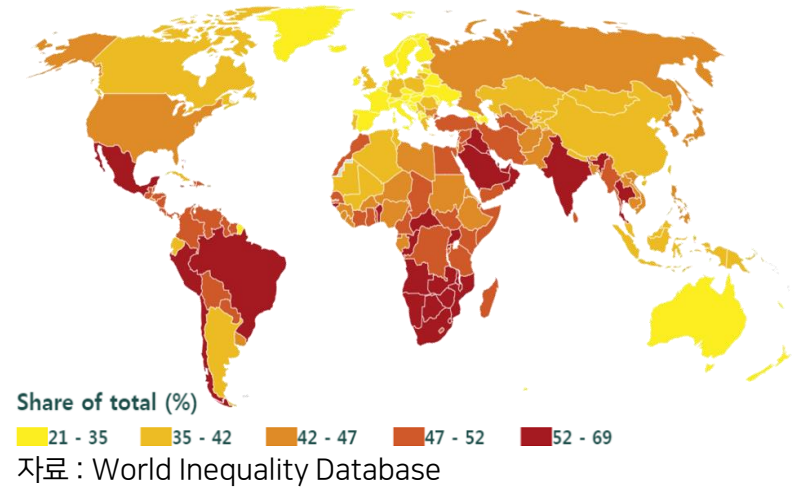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 (2018년) 35.9% → (2026년)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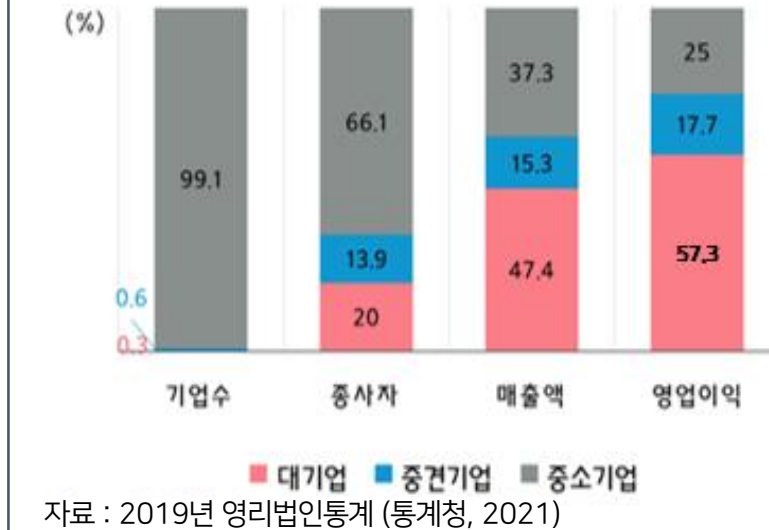


# 01 양극화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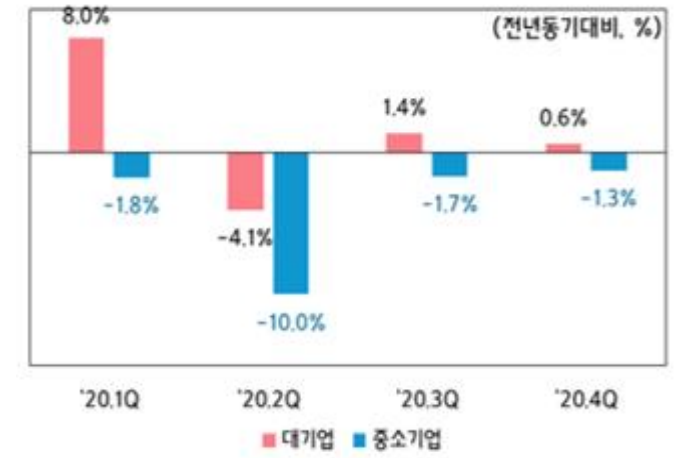
국가별 상위 10% 소득 편중



2019년 영리법인 기준 기업규모별 주요 항목 현황



2020년 제조 대·중소기업 생산지수 증감률 비교



- 코로나19 이후의 가장 큰 숙제는 양극화 해소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 0.3%의 대기업이 총 영업이익의 57.3%를 차지, 99%의 중기는 25%
- 코로나 이후 회복력 격차 : 중소기업 생산 감소, 양극화 심화 → 이익과 일자리 축소 → 저성장 고착화

## 02 플랫폼·비대면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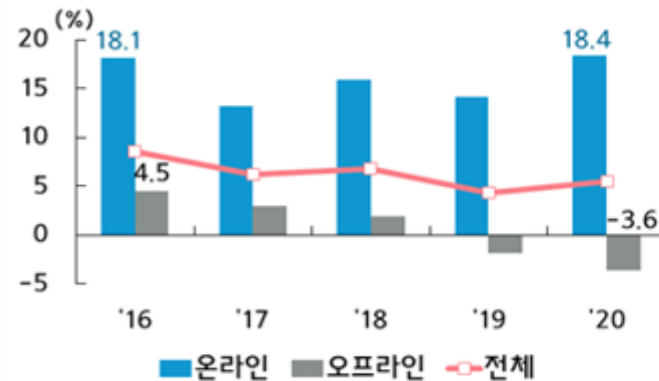
2007년과 2021년 세계 시가총액 5대기업 비교

07년	기업명	21.07월	기업명
1위	페트로차이나	1위	애플
2위	엑슨모빌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GE	3위	사우디 아람코
4위	차이나모바일	4위	아마존
5위	공상은행	5위	구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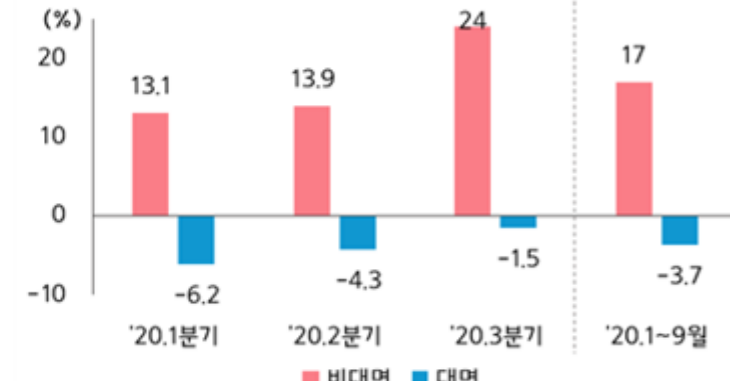
■ 에너지 ■ 인프라 ■ IT ■ 금융

자료 : Market Cap

온·오프라인 유통매출 및 비대면·비대면 결제 증감률



자료 : 산업통상부



자료 : 한국은행

- 글로벌 시가총액 5대기업 : (2007년) 에너지기업 → (2021년) 빅테크기업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부상 : 오프라인 유통 매출은 감소세이나 온라인 성장세 지속, 비대면 결제 방식도 큰 폭 확대
- 비대면 경제 활동이 증가하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등으로 중소기업 제품 회피 성향 심화
- 구매 제품·방식·경로 등의 다변화로 중소기업의 유통·판로 기회는 증가한 반면, 비용은 급증할 전망

# 03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디지털전환 투자 계획



- [5G 업그레이드 명령] 5G 전국망 구축 지원
- 5G 무선 인프라 및 농촌 브로드밴드 공급 등을 포함하는 1조 달러 규모의 SOC 투자안 검토



-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이상 AI산업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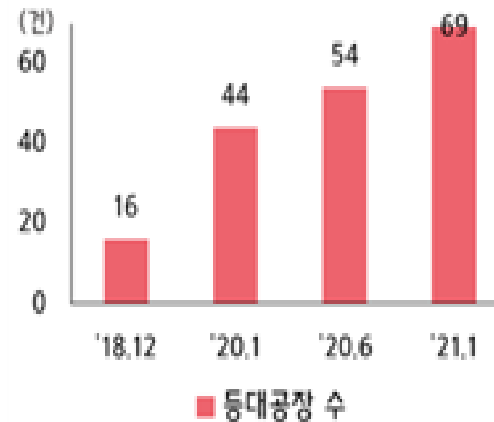


- [신인프라 투자] 5G이동통신망 구축,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2025년까지 1.2조위안 투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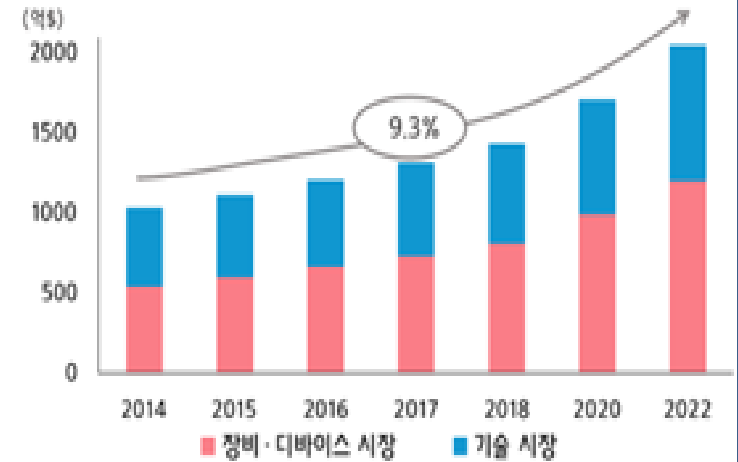


- [한국판 뉴딜] 5G 데이터인프라,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등대공장 및 전 세계 스마트제조 산업 시장의 성장



자료 : W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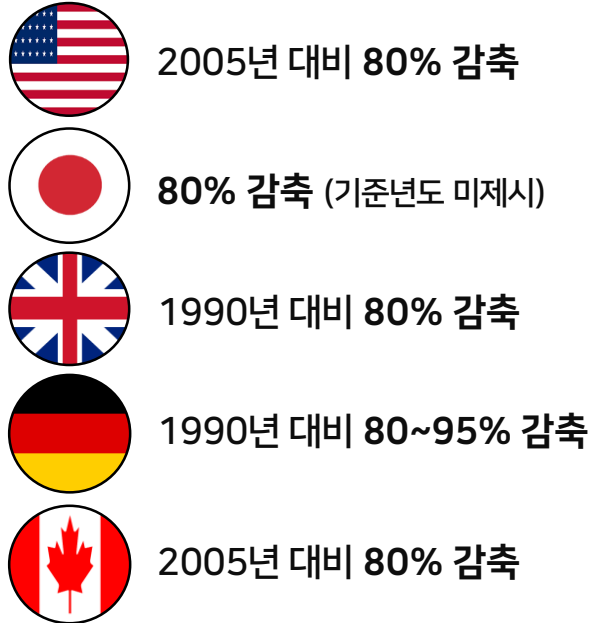
자료 : MEKETS AND MARKETS (2017)  
\*2017년 이후는 추정치

- 4차 산업혁명 흐름 속,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크게 부각
  - 각 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기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ICT 인프라 및 관련 산업에 적극 투자할 전망
  - 디지털 전환 흐름을 활용한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 창출과 동시에 전환 지체 시 소외 위험성이 상존
- 스마트공장은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부문 : 관련 기술 도입 기업의 꾸준한 증가로 생산성 제고에 기여

## 04 ESG·탈탄소 본격화



### 주요국의 온실가스 2050년 감축목표



자료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환경부)

###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0) 달성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
-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2021.8.31)

### 각국의 공급망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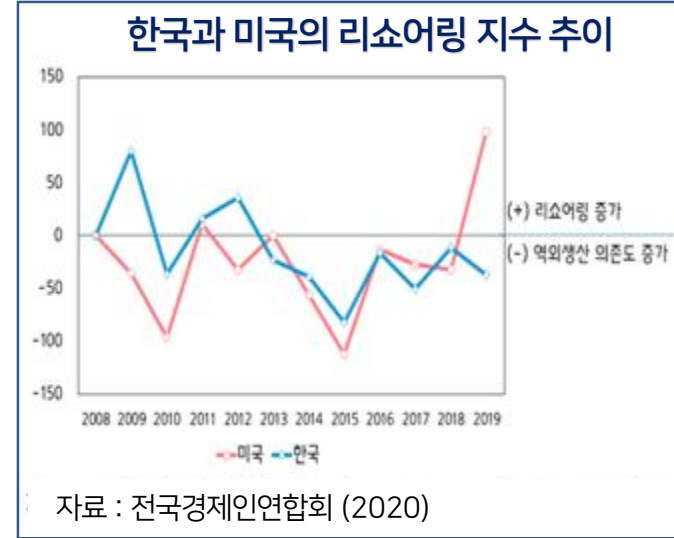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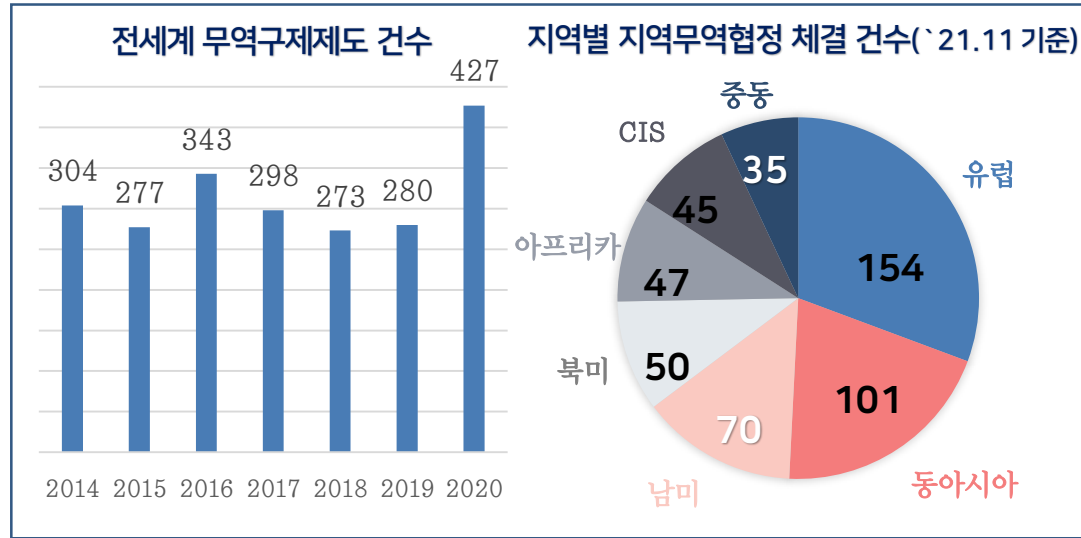
-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 입법 권고안 채택 ('21.3)



- 공급망 인권 및 환경 규칙 위반 시 벌금 부과 ('23 시행)

- 파리기후협약(2015년)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 상승을 1.5°C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Netzero) 달성 필요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의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합의 및 구체적 실현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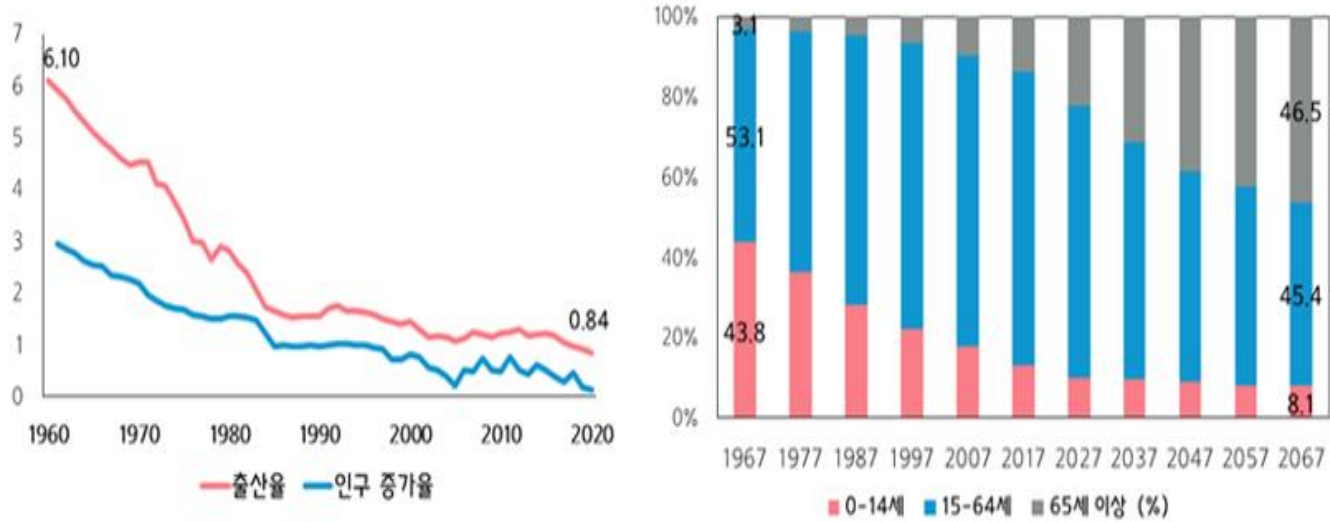
# 05 세계화와 지역화 : 글로컬리제이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 英 브렉시트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 코로나19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전세계 확산 양상
  - 무역장벽 확대, 국제무역기구의 기능 약화와 동시에 지역무역협정이 빈번해짐
  - 장기적인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 전망
- 리스크 분산을 위한 생산 거점 다변화 및 리쇼어링 확산 : 미국 급증 vs 한국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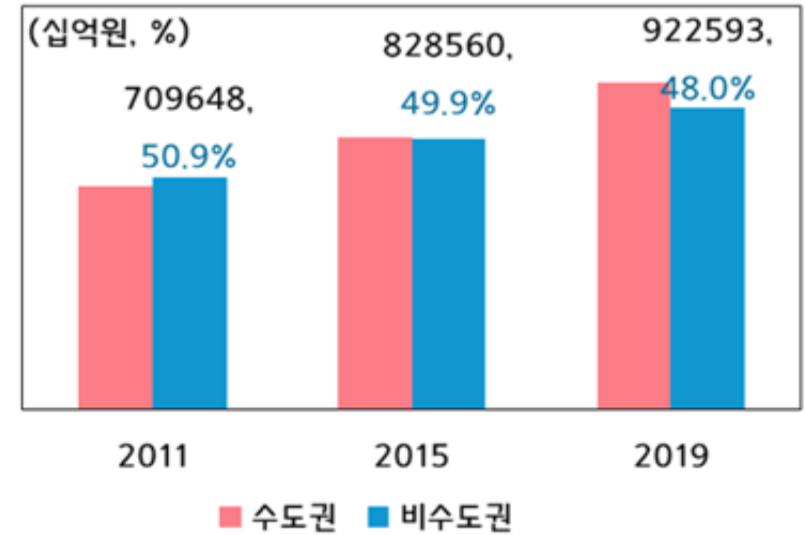
## 06 인구구조 변화

한국 출산율 및 연령별 인구구성비 (1967~2067)



자료 : 통계청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지역소득 (통계청)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028년에는 신규 인력이 수요보다 38만5천명 부족할 전망 →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예상
  - 2020년, 최초로 인구 데드크로스 진입 (사망자 30만명 > 출생자 27만명)
-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은 지난 2015년 이후 수도권에 추월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성장 역량이 낮은 비수도권에서 심화될 가능성 존재

# 메가트렌드가 내포한 시사점

### 양극화 심화

코로나19 이후의 기업 규모별 회복력 격차는 결국 사회 전체의 경기회복과 성장을 지연시키는 요인

### 플랫폼·비대면 확산

제품과 구매 방식 및 경로 등이 다변화되어 중소기업의 유통 판로 비용 급증 전망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새로운 성장기회이지만 전환에 실패할 경우 성장 소외 위험성이 상존

### ESG·탈탄소 본격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과중한 의무로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및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 필요

### 세계화와 지역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무역 의존도와 원사업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

### 인구구조 변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지방 중소기업 및 지방 경제 붕괴를 가속화 시킬 전망

## 중소기업의 위기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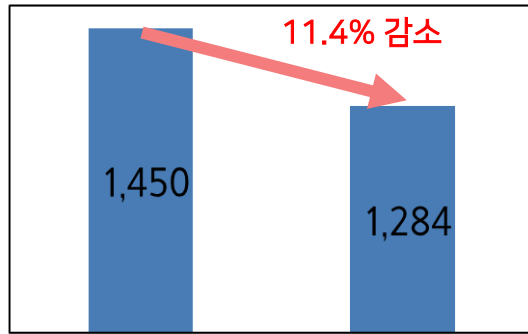
- 01 코로나 19 위기
- 02 제한적 디지털 전환 수용
- 03 낮은 생산성
- 04 시장의 불균형
- 05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 06 불합리한 규제



# 01 코로나 19 위기

직원 둔 자영업자 수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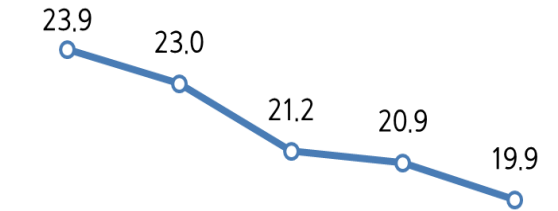


'20년 1월      '21년 9월

자료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통계청)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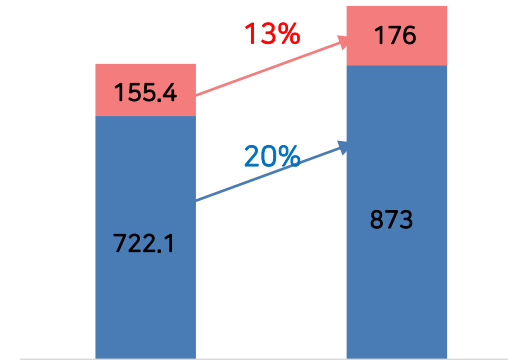


2009    2012    2015    2018    2021

자료 : 매년 9월 기준 (통계청)

기업대출 금액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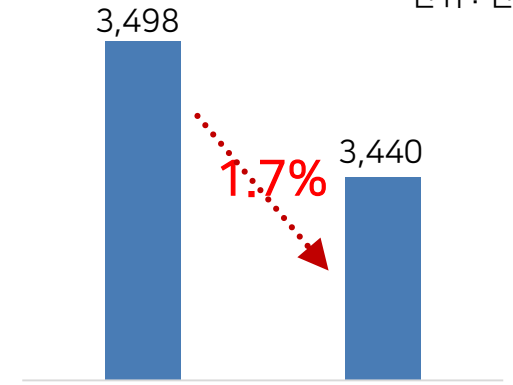
20.1월      21.9월

■ 중소기업 ■ 대기업

자료 :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중소제조업 취업자 감소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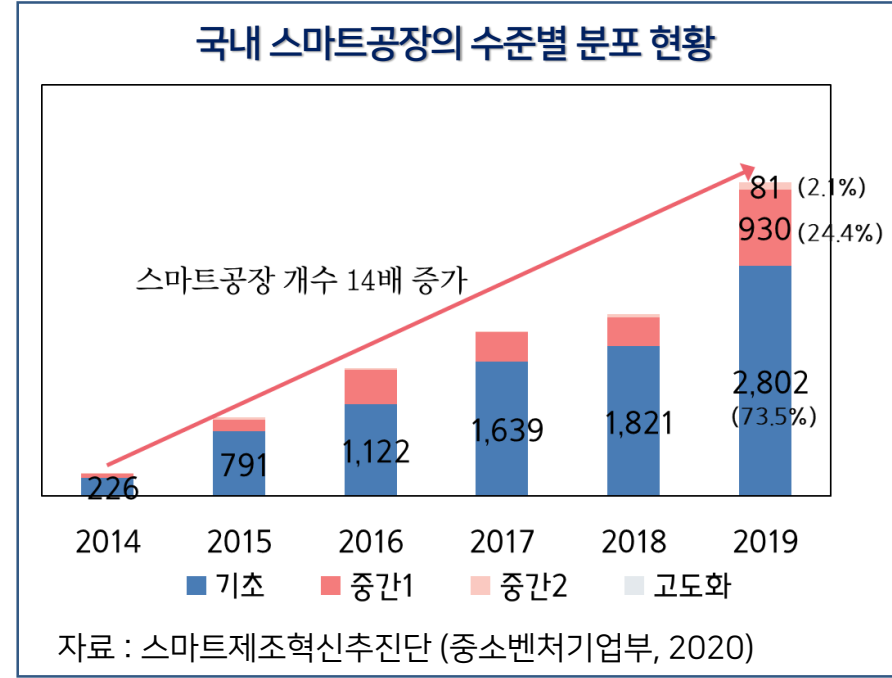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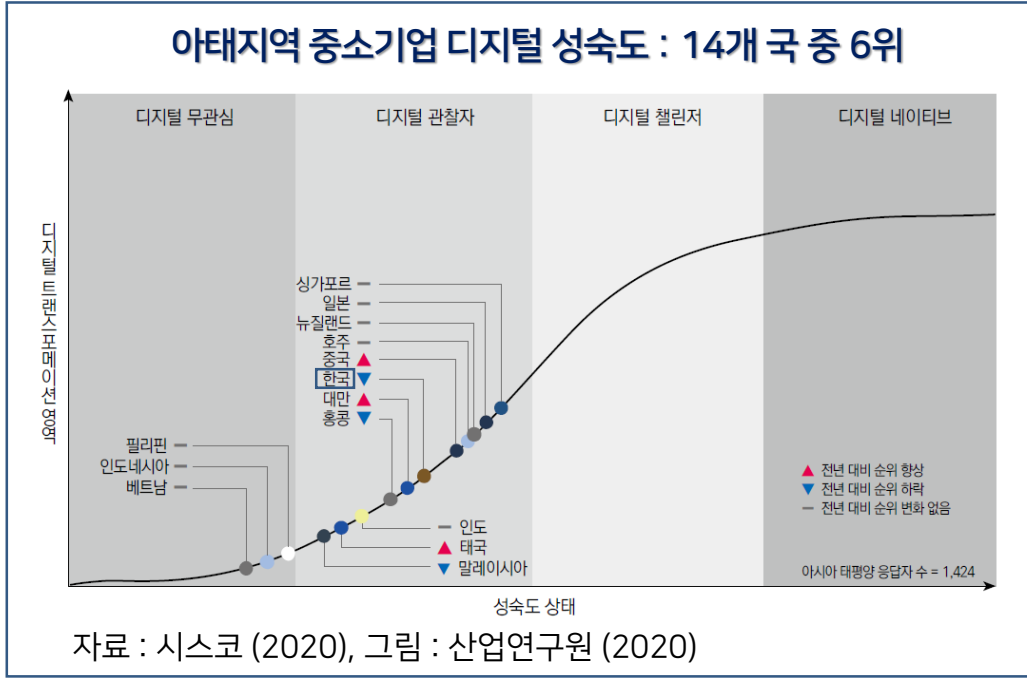


20.9월      21.9월

자료 : 중소기업동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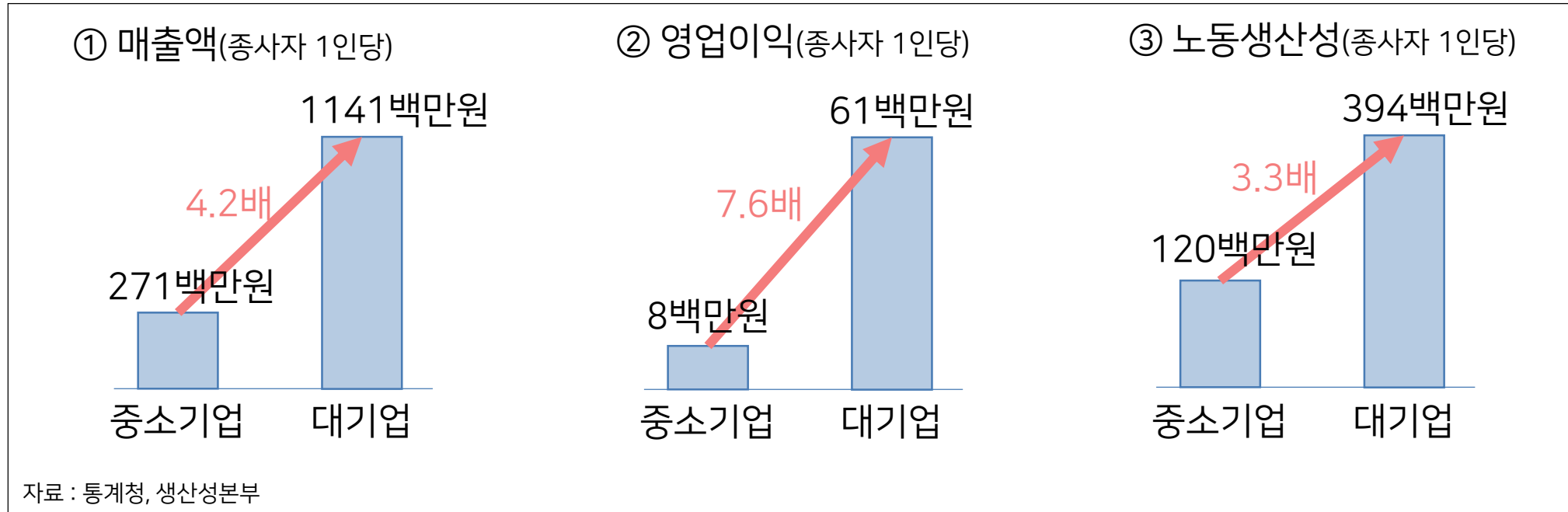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고용 위축, 경영여건 악화 등의 어려움 존재
- 경영안정 지원과 재기 안전망을 확충하는 적극적인 지원 체계 요구

# 02 제한적 디지털 전환 수용 낮은 디지털 적응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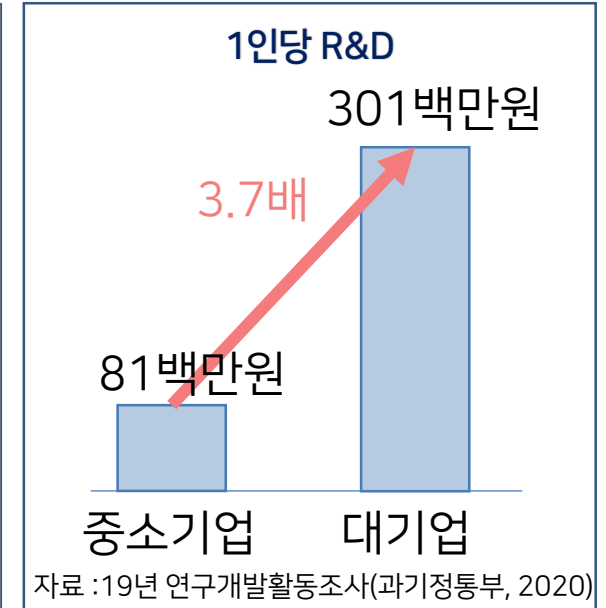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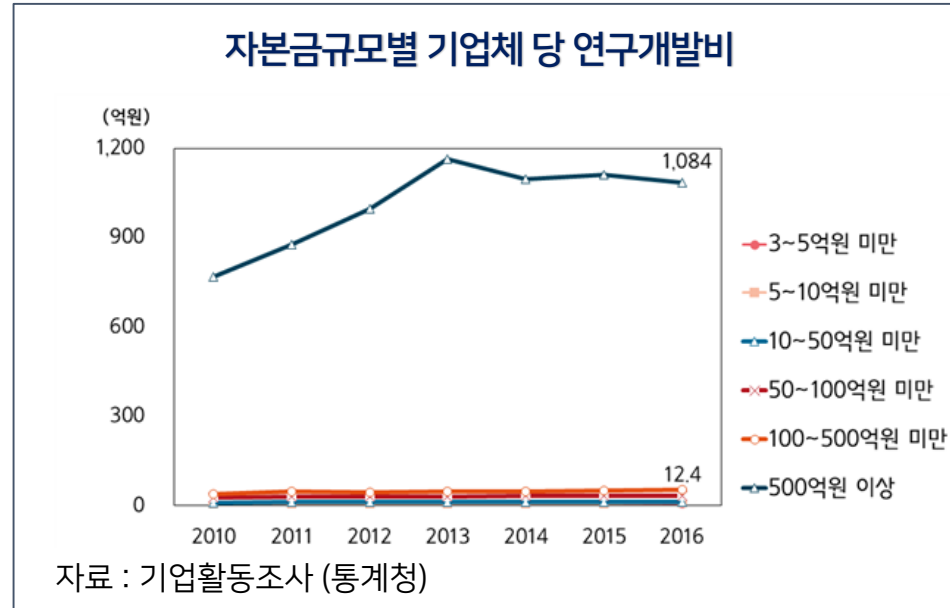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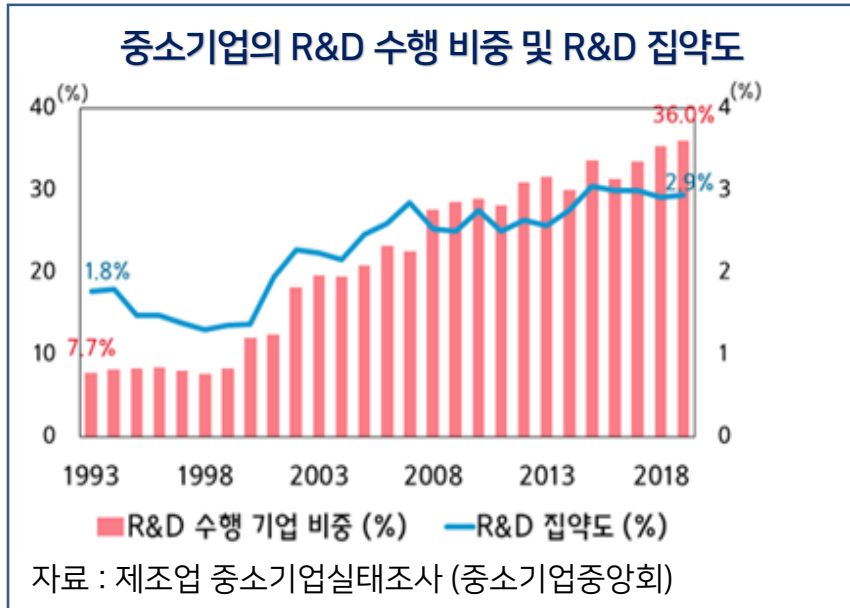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내용은 아태지역 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
- 양적 성장에 그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의 고도화가 이후 중요 과제
  - 대부분의 스마트공장 (73.5%)이 생산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초 단계
  - 단순한 생산과정 최적화 혹은 생산성 향상을 넘어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가치창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중요

## 03 낮은 생산성 심각한 생산성 격차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시급 (매출 격차 4.2배)
- 영업이익 격차는 경제 전체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양극화 심화 요인 (영업이익 격차 7.6배)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28.7%)은 OECD 평균(64.8%)에도 못 미치는 수준 (생산성 격차 3.3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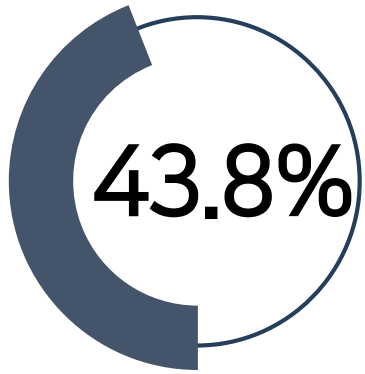
## 03 낮은 생산성 개별 중소기업 R&D 노력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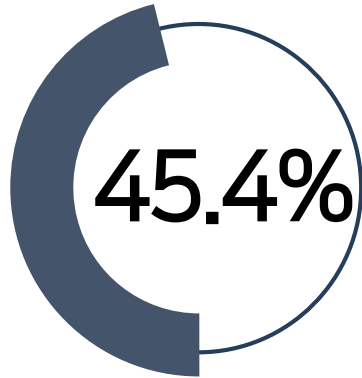
- 산업 구조 고도화에 따라 중소기업 중 R&D 수행 비중과 R&D 집약도는 꾸준히 상승  
- 하지만, 연구개발비는 수년간 정체되어 있고, 기업 규모별 R&D 편차가 극심 (R&D 격차 3.7배)
- 개별 중소기업 단위의 R&D로는 한계가 존재, 업종별 공통 애로 기술 개발 등 규모의 경제 구현 필요

## 04 시장의 불균형 기울어진 협상력

코로나 이후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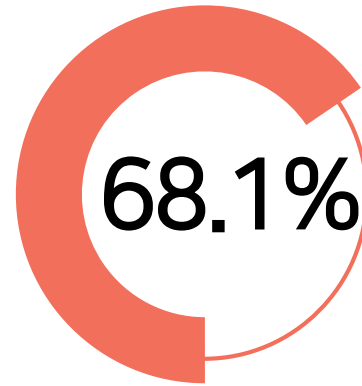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이후,  
양극화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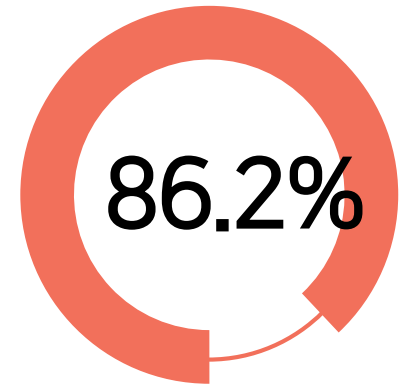


양극화 해법1순위  
불공정 거래 개선

원자재 가격 상승조차 반영 안되는 거래 관행



원자재 생산 대기업,  
가격 일방 통보



원자재 가격 변동,  
납품단가 반영 어려움

- 중소기업 43.8%는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 심화, 45.4%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공정 거래 개선 필요
- 시장에 만연한 갑질 문화를 타개하고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 및 상생 문화 정착 요구

## 04 시장의 불균형 플랫폼 독점화

### 직접 진출을 통한 시장 잠식

- ✓ 지네발식 사업 확장
  - 카카오 : ('15) 45개 → ('21) 136개
- ✓ 골목상권 영업 침해
  - 배민(B마트), 요기요(요마트)
- ✓ 우회 진출로 규제 회피
  - 네이버(금융, 유통, 엔터사업 진출)
- ✓ 정보 독점, 직영 운영
  - 숙박앱(야놀자, 여기어때)

소비자

독과점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 ✓ 최대 40% 수준의 광고·수수료 부과
  - 배민, 무신사, 야놀자
- ✓ 불분명한 노출 기준
  - 쿠팡(자사상품 상위)
  - 네이버(검색 알고리즘 조작)
- ✓ 일방적인 정산절차
- ✓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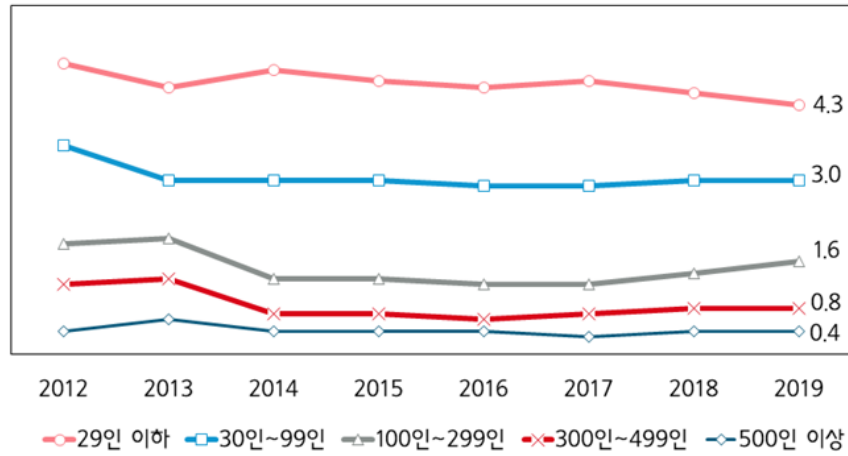
입점  
업체

플랫폼 의존도 증가 (숙박앱 64%, 배달앱 94%)  
불공정거래 발생(20.7% 경험)

- 소비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심화
-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 다수 확보 → 시장 독과점 → 유료화(수수료 인상) → 소비자와 입점업체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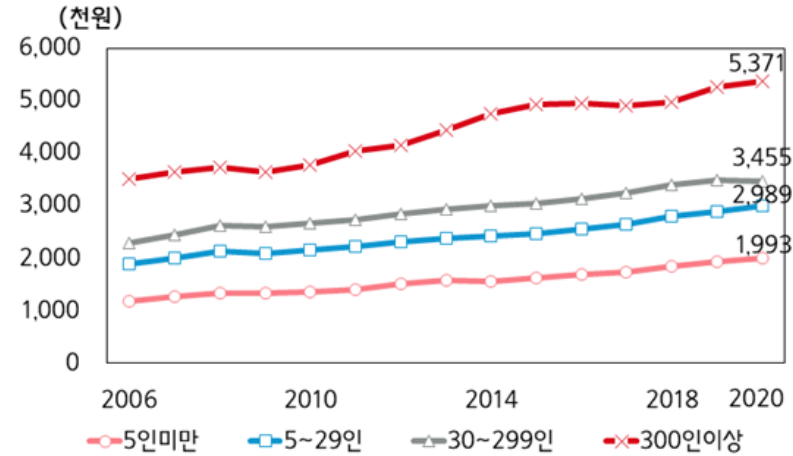
# 05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기업 규모에 따른 이중구조 심각

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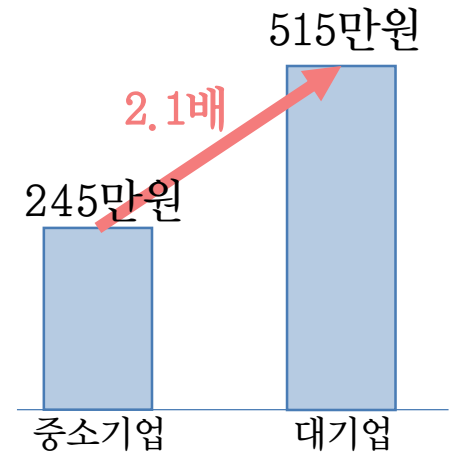
자료 :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기업 규모별 월급여 추이



자료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월급여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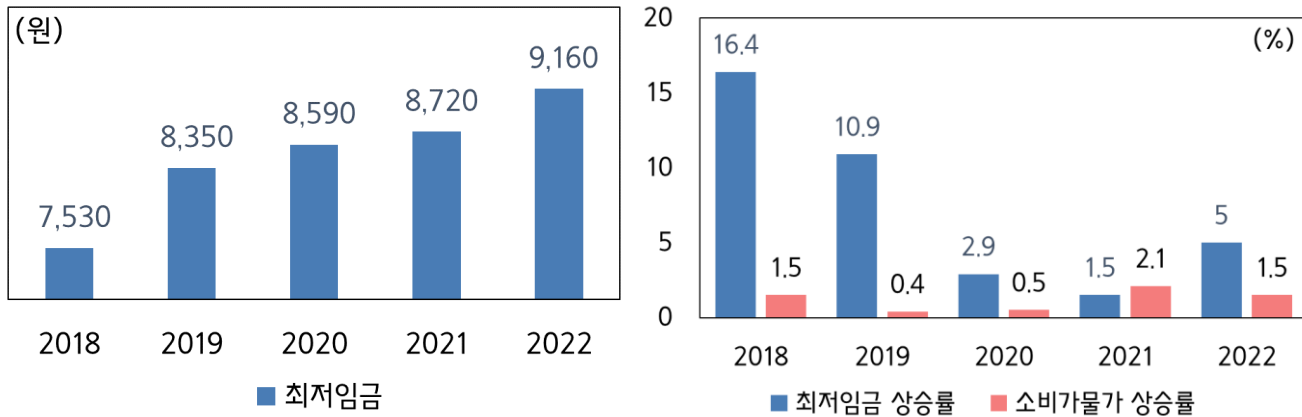


자료 :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결과(통계청)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인력 부족률 심화 : 29인 이하 4.3% vs 500인 이상 0.4%
- 과도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2.1배)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잦은 이직 유발

## 05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중구조 심화 요인

###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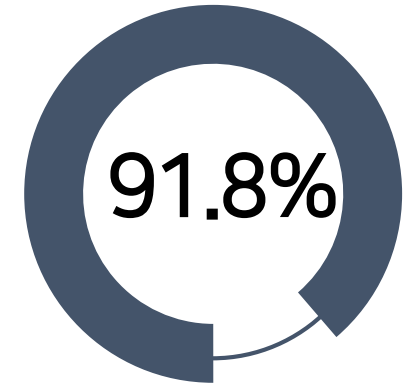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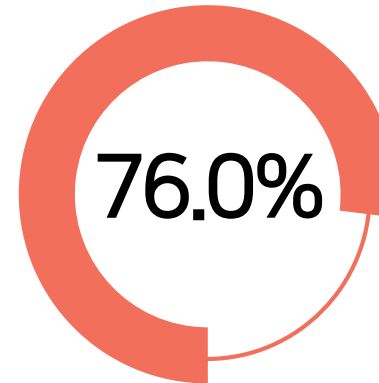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021, 202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예측치

###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입장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감소 등 이유로 반대

주52시간제로 인한  
임금 감소 경험



자료 : 주52시간제 중소기업 의견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21.10)

-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
-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초래, 중기근로자의 76%가 반대



# 06 불합리한 규제 규제의 역진성

규제 유형 분야별 접수 현황 (2009~2018) 및 비용현황

<규제 유형 분야별 접수 현황 (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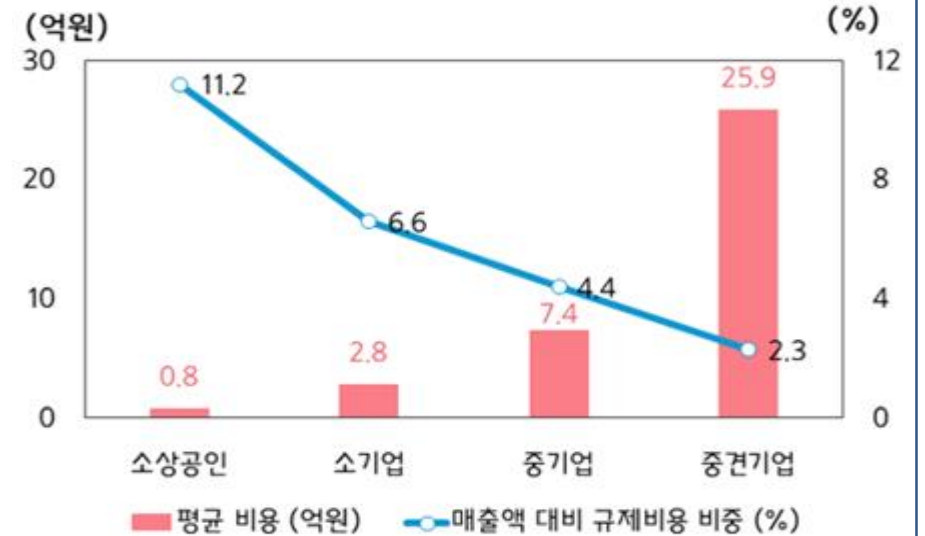
총계	금융	기술	보건	안전	상생	세계	수출	인력	입지	창업	판로	환경	기타
22,607 (건)	1,593	1,593	2,036	672	639	849	279	1,819	4,104	1,699	2,301	1,721	3,302
100 (%)	7.0	7.0	9.0	3.0	2.8	3.8	1.2	8.0	18.2	7.5	10.2	7.6	14.6

<규제 유형별 비용 현황>

	총계	창업등록	공장신증설	검사인증	준조세	의무교육	환경폐기물	정부조달	외국인력	지도점검
비용	680.25 (억원)	14.9	120.8	3.9	506.6	3.4	27.0	3.4	0.1	0.1
	100 (%)	2.2	17.8	0.6	74.5	0.5	4.0	0.5	0.02	0.01
4보험 제외	325.23 (억원)	14.9	120.8	3.9	151.6	3.4	27.0	3.4	0.1	0.1
	100 (%)	4.6	37.1	1.2	46.6	1.0	8.3	1.1	0.04	0.02

자료 : 산업연구원(2019)

기업규모별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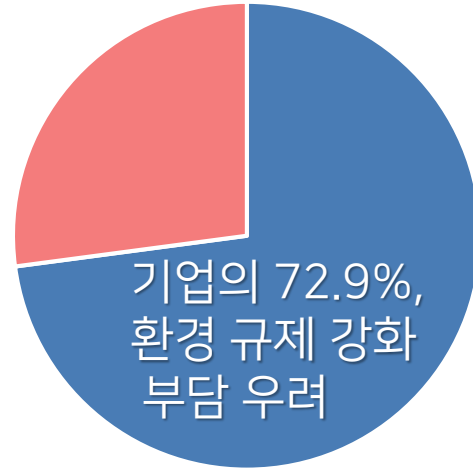
자료 : 산업연구원(2019)

- 중소기업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진성 : 매출액 대비 규제 비용은 기업규모에 반비례
- 기업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타파 → 투자 친화 환경 조성 절실

## 06 불합리한 규제 환경 부담 강화

### 중소기업이 대응해야 할 다양한 환경 규제

분야	환경규제
제조·수입 원부원료 관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령 (화평법)
제품품질 및 승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고객대응 및 공급망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사업장 시설안전관리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오염물질 배출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법)
환경매체 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법) 물환경보전법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10.28.

POSCO

- 협력사 자체 ESG 평가 및 기준 미달 시 납품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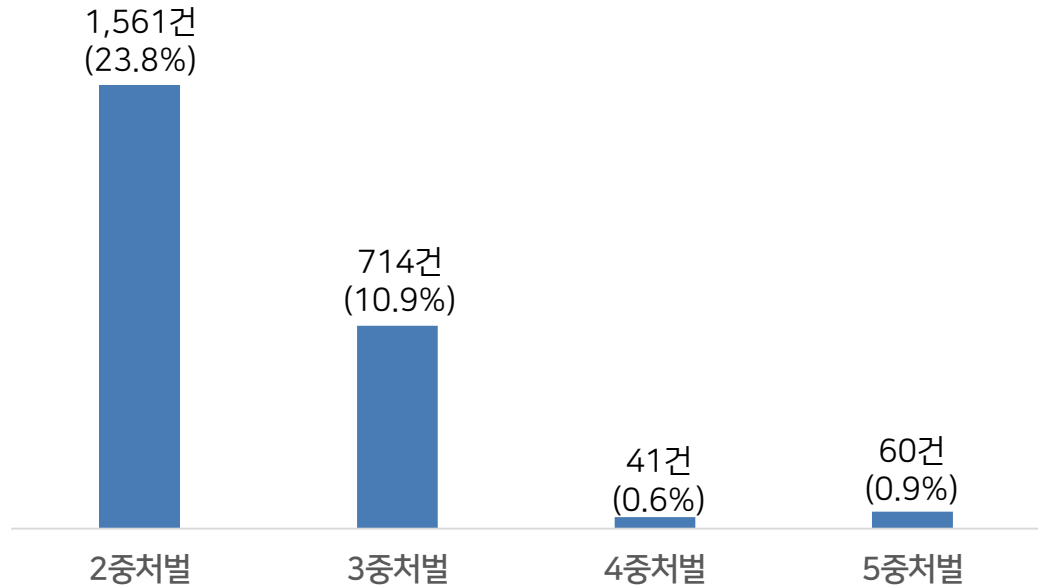
HYUNDAI  
MOBIS

- 1~3차 협력사 ESG 리스크 자가진단

-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음 : 한국(26.1%), 일본(19.5%), EU(14%), 미국(10.6%)
-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 급격한 환경 규제 시 개별 기업의 부담 가중
- 중소기업의 업종과 규모별 특성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정책 마련 필요

## 06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친노동 정책과 기업 처벌

경제 법률의 중복수준별 처벌 현황



자료 : 전경련

### 기업·소상공인 옥죄는 친노동 정책

- ▶ 주 52시간제 : 업종별 특성을 무시,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시행(7.1)
- ▶ 2022년 최저임금 2021년보다 5.1% 인상된 9,160원(지불여력을 무시)
- ▶ 법과 시행령 조항 내용이 불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2022.1월 시행)

- 경제부처 16곳 소관 법률 721개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항목은 총 6,568개
- 주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현장을 무시한 노동정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 가중

## 중소기업의 현실이 내포한 시사점

코로나 19 위기

경영안정 지원과 재기 안전망 확충하는 적극 지원체계 요구

제한적 디지털 전환 수용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플랫폼 독점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 방지 필요

낮은 생산성

성장 주체로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시장의 불균형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불공정 거래 환경개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인력 수요와 공급 사이의 미스매치,  
지방 경제의 붕괴 해결 위한 제도 필요

불합리한 규제

기업 투자와 혁신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업종과 규모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제도 정비 필요

# 중소기업 정책 방향

## 중장기 메가트렌드

양극화 심화  
플랫폼 비대면 확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ESG·탈탄소 도입 본격화  
세계화 지역화  
인구구조 변화



## 현재 중소기업 위기

코로나 19 위기  
제한적 디지털 전환 수용  
낮은 생산성  
시장의 불균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불합리한 규제



##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 혁신 전환

△노동규제 개선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 지원

### 핵심 주체의 성장 촉진

△협동조합 △전통기업 △소상공인  
△창업·벤처·여성

### 성장 인프라 구축

△신성장·신시장 기반  
△사업기회공정(공평)기반 △인력·일자리 창출

### 사회 안전망 확충

△위기 대응 및 복지 체계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 중소기업 정책 과제

## 혁신 전환

### 1 노동규제 개선

- ◆ 주52시간제 개선  
노사합의 기반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등
- ◆ 최저임금제 개선  
규모별 구분시행,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 ◆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처벌규정 완화, 지원 확대 등

### 2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 ◆ 민간분야제값 받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 공공분야제값 받기  
최저가 낙찰 조항 폐지, 낙찰하한율 도입 및 상향조정, 예정가격 산정 개선

### 3 탄소중립·ESG 지원

- ◆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대책 마련  
중기전용 요금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탄소저감시설 지원
- ◆ 협동조합 통한 탄소중립 대응 지원
- ◆ 연기금 활용한 탄소중립·ESG 정책지원 모델 마련

# 중소기업 정책 과제

## 성장 촉진

### 4 협동조합

- ◆ 중기간 경쟁품목 확대 및 수시지정제 도입
- ◆ 조합추천 수의계약 명칭 변경 및 한도 확대
- ◆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 적용 배제
- ◆ 부정당제재 개선

### 5 전통기업

- ◆ 노후산업(농공)단지 활성화
- ◆ 뿌리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도 도입
-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화
- ◆ 5억미만 공사 종합 기업 도급 제한

### 6 창업·벤처·여성

- ◆ 내부회계제도 개선
- ◆ 지정감사인제도 개선
- ◆ 유니콘기업 육성
- ◆ 벤처투자 세제지원
- ◆ 프랜차이즈 글로벌화
- ◆ 여성가장 창업지원
- ◆ 여성기업 벤처펀드 지원 확대
- ◆ 청년창업특화상가 신설

### 7 소상공인

-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 ◆ 주휴수당 폐지
- ◆ 중소유통 진흥법 제정
- ◆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개선(사업영역 보호)

## 중소기업 정책 과제

### 인프라 구축

#### 8 신성장·신시장 기반

- ◆ 중기 생산성향상 특별법 제정
- ◆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 ◆ 중소기업 승계원활화
- ◆ 지식재산(특허) 공제제도 활성화
- ◆ 비관세장벽 지원체계 구축
- ◆ 개성공단 재가동

#### 9 사업기회 공정(공평) 기반

- ◆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활성화
- ◆ 중기 전용 홈쇼핑 확대
- ◆ 중기 특화 신용평가체계 구축
- ◆ 스케일-업 금융지원 개선
- ◆ 기업인 공직봉사 참여 허용

#### 10 인력·일자리 창출

-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활성화
- ◆ 중소기업 기술인력 스카우트 책임분담금 제도 도입
- ◆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 고급인력 양성
- ◆ 중기 일자리플랫폼 확대
- ◆ 외국인력 제도 개선



## 중소기업 정책 과제

### 안 전 망 확 충

#### 11 위기대응 및 복지체계 확충

- ◆ 한국형 PPP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 ◆ 소기업·소상공인 종합 복지 지원시스템 구축
- ◆ 실패중소기업인재기지원 체계 구축
- ◆ 중기근로자 국민주택 특별 공급 확대 (3% → 15%)
- ◆ 영세중소기업 회생지원 (공제기금 압류금지)
- ◆ 자영업 근로자를 위한 노란우산 트랙 신설

### 지역경제활성화

#### 12 지역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 ◆ 지역별 「중소기업 협업지원센터」 설치
- ◆ 지역별 「중기승계활성화지원조례」 제정·지원
- ◆ 지역별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 ◆ 지역형 취직 사회책임제 전국적 확대
- ◆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법제화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감사합니다

---